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끝내 사죄 없이 떠난 노태우” 오월단체·시민사회 성토

“진상 규명 협조·참회 없이 가...전두환, 죽기 전 사죄를”  
 “역사적 죄인, 국립묘지 안장 안 돼”...안장 여부는 미지수

5·18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학살 책임을 직접 사죄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아들들(대신) 보내 묘지를 참배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 입장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백이나 기록물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 사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세

상을 떠났더니 안타깝다”며 “그러나 노씨가 12·12군사정변, 5·18 강경진압 등에 있어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끝까지 밝혀야 하고 응분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민주국가에서 역사의 죄인이 대통령 예우를 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사면 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될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정을 유린한 반란 수괴가 죽어서도 대통령 예우를 누리다면 오월단체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군부 독재의 한 축인 노태우 본인이



죽기 전까지 끝내 사죄 한 마디 하지 않았다는 데 분노한다. 장남의 대리 사죄도 여전히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반성 없는 노태우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리 사과를 하고 있는 아들도 역사 왜곡 회고록 개정 등 반성이 담긴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를 위해 분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을 기리는 국립묘지에 노씨가 안장되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만약 노씨가 안장될 경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국가장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법안은 정쟁 수단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장법 개정 문제를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오를 참회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노씨에게 분노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별세 관련 기사 댓글에 ‘서슬 퍼릴 때 주인공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네. 덧 없네. 착하게 살아라 두환아’라고 적었다.

‘대통령 불이치 마라. 독재자, 범죄자 주제에 무슨 대통령이나, ‘노재현은 아버지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전두환은 언제 빌 것인가’

라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노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불투명하다. 노씨는 12·12군사정변을 주도한 신군부 주역으로서 11·12대 대통령 전두환씨와 함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인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기동취재본부

## ‘투자심리 위축’ 강진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44곳 취소·28곳 폐업

한전 계통연계까지 장기간 소요...거레가격하락 투자심리 위축 원인

전남 강진군은 발전사업 준비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44곳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발전사업허가증을 가진 반납한 28곳에 대해서는 폐업처리했다.

전기사업법 제9조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허가

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군은 전기사업자의 단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제때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지구입 비용, 설계비용 등 금전적 손실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한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한전 계통연계까지 평균 3년~5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근 SMP(계통한계가격)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강우 시 토사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준비기간이 종료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전 착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고기보다 비싼 金상추”

상추·오이값 폭등...계란은 소폭 내리

갑작스런 기온하강에 의한 큰 일교차로 채소류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상추는 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기보다 비싼 금상추”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채소류 중 상추를 비롯해 호박, 오이 가격이 대체로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기준 광주 서구 양동 시장에서 거래된 청상추(100g 기준) 소매가격은 1년 전 600원에서 22000원으로 가격이 266.67% 폭등했다. 2주전(800원)과 비교해도 가격은 175% 급등했다. 애호박 가격도 120% 폭등했다. 1년 전 1개당 1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2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오이(취정·10개)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1년 전 7000원이던 것이 현재 1만3000원으로 가격이 85.71% 상승했다.

정부의 수급물량 확대에 처수던 계란 가격은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계란 가격은 특란(30개·1판) 기준 6230원에 거래돼 2주전(6400원) 대비 2.66% 내렸다.

최이슬기자



영랑생가 지붕 새단장 26일 강진군 강진읍 탐동마을 영랑 김윤식 생가(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252호)에서 주민들이 새로 만든 이엉으로 안채 지붕을 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초가이엉 작업은 전통 기술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강진군 계몽)

워킹레일

**신세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수시모집 (경력인 우대)

장성을 방울샘길 12 (장성교육지원청 앞)